

한·중·일 거리에예술축제 '전주예술난장' 개최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이용률 4배 증가

한옥마을·풍남문 광장·전라감영서 한·중·일 화합 위한 주제공연·동아시아 거리예술포럼 등 다채롭게 열려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에서 한·중·일 3국의 거리예술을 만날 수 있는 축제가 펼쳐졌다.

전주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주한옥마을과 풍남문 광장, 전라감영 서편 부지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예술난장' 행사를 열었다.

전주에서 펼쳐지는 14개 주요 축제를 한 데 엮은 10월의 축제시즌 '전주페스타 2023'의 한 자리를 차지한 이번 '전주예술난장'에서는 한·중·일의 거리예술문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평화를 희망하는 주제공연이 펼쳐졌다.

주제공연은 3국의 음악·무용·대형 퍼펫 공연 등 동아시아 3국의 다양한 예술 합동 공연 형식으로 진행돼 동아시아의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한옥마을과 풍남문 광장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한중일 거리예술공연이 곳곳에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풍남문 광장과 경기전 광장, 태조로 일대의 7개의 구역에서는 마술, 마임, 공중 퍼포먼스, 차려, 음악공연, 인형 퍼레이드 등 온갖 예술공연이 방문객을 찾았다.

이와 함께 풍남문 광장에서는 대형 퍼펫(인형)을 이용한 퍼펫 카니발도 이목을 끌었다. 퍼펫 카니발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테마로 진행되며,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퍼레이드와 놀이 등으로 구성됐다.

행사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동아시아 거리예술포럼이 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이 포럼은 동아시아 지역의 거리에 술이 나아가길 방향과 접점형 거리예술 축제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거리예술을 이해하고 전주만의 특색있는 거리예술축제를 지속해나갈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주예술난장은 우리 지역의 많은 예술가 등 한중일의 다양한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축제가 지역 예술의 진흥과 지역 거리예술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 그동안 영화와 소리, 무형유산, 종이, 서예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중 활발히 추진해왔으며, 오는 11월 2일로 예정된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폐막식을 끝으로 한중일 문화교류의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전주시설공단, 무료 개방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추석 연휴 무료로 운영된 전주시 공영주차장에 평소의 4배 넘는 차량이 다녀갔다.

주차장 이용률이 크게 늘면서 인근 상가 방문객도 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설공단에서 추석 연휴 중 무료로 개방한 객리단지 공영주차장의 모습. <사진=전주시설공단 제공>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6일간 무료로 운영된 24개 공영주차장의 이용 차량 대수는 총 4만4502대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7432대가 이용한 것이다. 이는 평상시(올해 6월 말 기준) 유료 이용 차량 대수 2029대의 3.7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10월 2일 차량 대수는 8718대로 4배를 훌쩍 넘겼다.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나흘간 매일 8000대가 넘는 차량이 각 주차장을 이용했다.

평소보다 많은 차량이 각 주차장을 다녀간 만큼 인근 상가의 방문객도 그만큼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귀성객과 시민 편의를 위해 올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0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천

절인 이달 3일 자정까지 6일간 한옥마을 주차장(1, 2, 3, 노상)과 시내 오거리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24개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

구대식 이사장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연휴를 즐기는 시민들 모두 주차난 없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명절을 지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 편익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지역사회의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시즈오카현서 전주시서관 우수정책 소개

전주시, 동아시아문화도시 글로벌지역센터 심포지엄 참가

책의 도시 전주의 우수한 도서관 정책이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인 일본 시즈오카현에 소개됐다.

전주시는 지난 8일 전주시서관 정책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일본 시즈오카현 컨벤션 아트센터 그란실에서 열린 '동아시아문화도시 글로벌 지역센터 심포지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시즈오카현립대학 글로벌지역센터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의 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의 박물관 및 도서관, 미술관의 역할"을 주제로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과의 동향과 역할, 활동 사례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시는 이날 책을 통한 지역 교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패널리스트 토론회에 참가해 '책의 도시, 전주'의 도서관 정책의 혁신사례와 우수정책 문화인프라를 소개했다.

또한 시는 스즈키 유미 시즈오카현립중앙도서관 조사과장과 시즈오카현 서점 관계자와 함께 문화 교류에 있어서 책이 수행하는 역할과 지원에 대해 토의하고, 추천 도서도 소개했다.

이에 앞서 일본 시즈오카현은 지난 8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해 전주를 방문해 한중일 문화 사업 교류를 제안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동아시아문화도시 글로벌지역센터 심포지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지난 8일 전주시서관 정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일본 시즈오카현 컨벤션 아트센터 그란실에서 열린 '동아시아문화도시 글로벌지역센터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는 지난 6일 전주시 재정사업과 조례 연계 정합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전주시회혁신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조례·재정사업 연계 정합성 검토로 재정민주주의 강화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분석·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최용철 의원)는 지난 6일 전주시 재정사업과 조례 연계 정합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전주시회혁신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주시 조례와 재정사업과의 연계 정합성 검토를 통해 집행부 행정사무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재정운용의 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심의 및 확정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구 용역 결과 전주시의 예산 심의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의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조례연구회가 되었다"고 약속했다.

특히, 재원 배분의 민주성을 의미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의 추진 근거에 대한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천서영 의원(조례연구회 사무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참고해 재정사업 집행과정에서 조례로써 규율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자료의 보완을 통해 의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철 의원(조례연구회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의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조례연구회가 되었다"고 약속했다.

전주시, 4개 장례식장 대표와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협약

효자장례타운과 시티장례문화원, 온고을장례식장, 고려병원장례식장 등 전주시 4개 장례식장이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 4개 장례식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주시 17개 장례식장 중 4개 장례식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협약 장례식장은 이용객에 대한 홍보를 통해 다화용기를 사용하는 장례문화 확산 및 장례식장 내 1회용품 감량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게 된다.

시는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가 확산

할 수 있도록 협약업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쓰레기가 연간 약 96만개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주시 4개 장례식장 대표들과 함께 사업 방법을 논의

하기 위해 총 3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사업 추진 방향과 지원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온 1회용품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많은 부분에서 1회용품 없는 소비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문화에서의 감량 실천이 전주시가 1회용품 없는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